

특혜 논란 한전공대 잔여부지 개발사업 재검토

나주시 아파트건설 용도지역 변경 민간사업자 협의 사전협상제 추진 개발계획안 폐기...공익 기여 강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전공대 잔여부지' 개발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12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윤병태 나주시장직 인수위는 최근 시민보고회를 통해 민선8기 핵심

과제 해결방안으로 부영cc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확보 방향을 마련했다.

핵심은 부영그룹(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하고 남은 잔여부지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사전협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부영주택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개발사업 계획안을 모두 폐기하고 향후 '나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해당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조례의 핵심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주는

대신 '공익적 기여'를 민간사업자와 협의하는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특혜논란 시비를 없애고 아파트 개발 등에 따른 공공기여를 최대한 확보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나주시장직인수위 관계자는 "협행 부영 측의 요구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과도한 특혜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모두 폐기하고 새롭게 조례를 제정한 뒤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부영cc 골프장 잔여부지 개발에 따른 특혜 논

란의 시작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4일 부영주택과 전남도, 나주시는 한전공대 부지 기부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재계순위 16위 부영그룹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컨트리클럽 부지 72만㎡ 가운데 40만㎡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했다.

부영 측의 골프장 부지 무상제공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나주 부영cc 일원은 경쟁상태였던 광주 첨단3지구 구를 제치고 한전공대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

부영이 최소 감평가 7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이르는 골프장 부지의 절반가량을 무상

으로 기부한 배경에는 금전적인 반대급부보다는 기업의 사회환원 측면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부영 측은 대학부지로 무상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부지 32만㎡에 5,000여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안을 2019년 10월 나주시에 제출하면서 특혜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부영 측은 '골프장인 녹지의 토지 용도를 고층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업자 측의 요구대로 토지 용도가 변경돼 아파트 건설이 이뤄지면 사업자는 제반비용을 제하고 최대 1조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도한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나주시는 부영 측이 제출한 개발계획안에 대해 자문단 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나주=이재순 기자



정무창 시의회의장, 현충탑 참배 정무창 광주시의회의장이 12일 오전 제9대 의회 개원을 맞아 광주공원 현충탑을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서 공개하라”

광주고법 “영업상 비밀 아냐” 논란 방지...투명·공정성 제고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남지사·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남도·나주시는 나주혁신도시 한전공대 부지와 관련, 부영주택과 3자 간 맺은 합의서를 공개하라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

다. 다만, 부속 합의서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해 1월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는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 기부채납 뒤 남은 골프장 부지에 고층 공동주택 5,383가구 신축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녹지를 3종 주거 지역으로 상습시킨 도시관리·지구단위

계획 변경(5단계 수직 상승·용적률 기준 초과 등)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다. 광주경실련은 용도 지역 변경으로 부영주택이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협약서 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전남도·나주시는 “정보공개법상 경영·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한전공대 설립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광주경실련은 “경영상 비밀로 볼 수 없다. 협약서 내용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협약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광주경실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협약서 1항은 부영주택이 골프장 부지 75만㎡ 중 40만㎡를 한전공대 부지로 증여한다는 것으로, 이미 공개돼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남도·나주시가 법적 절차에 따라 골프장 잔여 부지에 대한 추상적 지원을 기재한 협약서 2항도 부영주택의 기술·경영상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1심은 “협약서 1항·2항을 종합하면, 한전공대 부지 증여가 사실상 대가 내지 보상으로 구현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부영주택이 잔여 부지에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도 규모가 상당하고, 나주시 전체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남도·나주시의 행정 처리에 대한 국민적 감시 필요성이 높다”고 했다.

또 “협약서 내용 일체를 공개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논란을 방지하고 골프장 잔여 부지 사업 진행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이를 공개하지 않아 얻을 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최환준 기자

정기 브리핑

김원이,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은 12일 “도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의 지역보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최소 인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갑 “금융사기 사전예방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안동·진도)은 12일 “대출 권유 빙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원이 금융사기 목적의 문자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이스 피싱 사기 전체·사전적 대응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www.dklmc.co.kr

도경건설 주식회사는

도로포장 전문 업체로서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특히 30여개를 등록하였고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에 9가지 기술을 등록, 특히 대한민국 최초로 결빙방지제를 생산하는 라인을 완성하여 SOC기술마켓에도 등록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한국형 포장기술을 완성에 나아갈 것입니다.

길 만드는 사람들
도경건설(주)
DOKYEONG Construction CO.,LTD

대표이사 신현국 박정연
Tel. 061_393_3315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봉암로 910

결빙방지재 (Grikol)

균열보수재 (DK-Creak Sealer)

반강성주입재 (Semi-rigid Pave)

고성능개질콘크리트 (BLMC)